

모두가 공감으로 만들어가는 공공건축을 위하여

일시

2019년 6월 25일 10:00

참석자 (가나다순)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안우성 은고당건축사사무소 소장

육근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팀장

이민아 협동원 대표

진행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건축과 도시공간> 2019년 여름호에서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5년, 국가 공공건축지원센터 개소 5년을 맞아 그간 추진해왔던 공공건축 관련 정책과 제도 개선의 성과와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참석자들은 공공건축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된 모든 주체의 합의와 공감이 중요하며, 협력과 인식 공유의 구심점으로서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염철호

2013년 6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제정되어 ‘공공건축지원센터’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고, 2014년 건축도시공간연구소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로 지정되어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자문예의 응답,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 등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 5년, 그리고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다섯 돌을 맞는 동안 이뤄온 성과와 변화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주시지요.

김소라

저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를 시행하는 초창기에 외부 전문가로서 참여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관련 담당자들을 실제로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느낀 것은 ‘이 제도가 정말 공무원들에게 필요했구나’하는 것이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이 건축직 전문가가 전혀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무엇부터 어떻게 계획해야 할지 어렵고 낮은 수준의 연속이었을 겁니다.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생기고 사업계획서에 대한 사전검토를 하면서, 지자체 공무원들로서는 답답한 것이 풀리는 면이 컸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우성

공공건축을 발주하는 모든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과 공공건축 발주 프로세스에 대한 지식을 일정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사전검토 제도의 의



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저도 초반에 사전검토에 참여하면서 담당 공무원들과 만나보면, 사전검토를 거치면서 발주를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깨닫거나, 권고사항을 듣고 충실하게 기획을 해서 다시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선 지어야지’하는 생각으로 시작했다가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거치면서 예산, 프로그램, 운영 기획에 대해 고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육근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이 만들어지면서 가장 많은 일을 했던 곳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특히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을 통해 공공건축물에 대한 설계공모가 의무화되면서, 많은 공모를 진행했는데요. 이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 〈공공건축 제안공모 운영 가이드〉 등 덕분에 담당 공무원들이 관련 업무를 보다 수월하게 진행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외부 전문가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내용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잘 활용해 온 것도 서울시가 아닌가 싶습니다. 설계공모의 의무화가 공공이나 건축업계에 가장 영향력이 있었던, 큰 변화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설계공모와 관련해서 서울시는 계속 제도 개선이나 보완을 해보려고 노력 중에 있고, 이 부분에 있어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왔습니다.

염철호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에 아쉬웠던 점이나 바라는 점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민아 건축업계에서는 공공건축 사업계획서 사전검토 제도를 아예 모르거나,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존재를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저의 경우도 작년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건립위원으로 공모발주에 관여하게 되면서, 그리고 올해 춘천시 총괄건축가로서 일하기 시작하면서 비로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을 알게 되었고, 그동안 센터에서 발간한 연구보고서도 찾아 읽어보고 있습니다. 사전검토 제도를 활용하는 사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 문의하는 사람은 공무원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직접 활용하는 사람이나 실효를 얻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홍보, 교육을 하는 것이 물론 가장 중요하지만, 세부내용들은 설계사무소 소장에게도 실질적으로 유익한 자료가 되기도 합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5년 성과와 활용점 등이 건축업계를 비롯해 공공건축 조성과 관련된 각계에 홍보되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김소라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가 현재 발주하는 사람과 시스템에 주목하고 있다면, 앞으로는 공공건축의 실제 생산에 참여하는 이들로 관리와 관심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공공건축 관계자 교육에도 힘을 쓰고 계신데, 지자체의 시설관리공단 또는 시설관리본부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토목과 건설 분야 전문가들이 많은데, 공공건축 디자인에 대한 인식이 약한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공공건축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품질 제고, 그 상관관계와



김소라 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안우성 은고당건축사사무소 소장



염철호 건축도시공간연구소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장



육근형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 공공건축팀장



이민아 협동원 대표

중요성에 대해 기존 전문가 영역에 계신 분들의 공감하고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염철호 현장의 이야기를 들어봤으면 합니다. 공공건축의 질을 높이려면 건축 기획만큼 좋은 설계자를 뽑는 것이 중요할 텐데, 설계공모를 통해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2020년 1월부터는 공공건축 설계공모 대상이 설계비 2억 원 이상 건축물에서 1억 원 이상 건축물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아울러 현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생활SOC 확충까지 고려하면 내년부터 연간 1,000건의 이상의 공공건축물이 설계공모를 통해 발주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현장의 문제는 없을까요?

이민아 사실상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우선 공공건축물을 질 높게 설계할 수 있는 설계자 수가 부족합니다. 우리나라 전체 건축설계사무소 가운데 7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역 내에서 우수한 설계자를 충분히 수급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면이 있습니다. 설계공모시행을 위한 심사위원 구성도 결국 건축가들로 대부분 채워져야 한다면 선수로 뛰는 건축가와 심사하는 건축가들의 역할이 중복적으로 교차되는 등 난관이 있을 듯하고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영주와 같은 지역의 성공 사례가 있었다는 점입니다. 무리하고 어려운 상황을 뚫고 가면서 공무원들이 끝까지 추진을 했고, 지역 내외부 공공건축가들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죠. 지자체에서

도 그런 사례를 직접 보게 되면서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양한 공모방식의 적용, 역량 있는 심사위원의 위촉 등 운영 면에서 여전히 생소한 시도여서 고민이 많지만, 원칙을 가지고 실험을 해나가 보겠다는 생각입니다.

안우성 공공건축이 대부분 설계공모로 진행될 경우에 서울과 수도권의 설계사무소와의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지역 건축사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 모 지자체에서 복지센터에 대한 심사를 요청해 다녀왔는데, 지역 건축사들에서 제출한 설계안들이 모두 훌륭했습니다.

그리고 설계공모 대상이 설계비 1억 원 이상 공공건축물로 확대가 되면 서울이나 수도권의 설계사무소에서 모두 감당하기에는 어려운 물량이 될 겁니다. 소규모 건축물도 많이 포함될 텐데, 작은 설계사무소에 맡길 수 있는 프로젝트도 늘어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지역과 소규모 건축사들에게 일이 돌아오는 선순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소라 학교에 있으면서 보면 우리나라에 건축학과 5년제 졸업한 학생들 정말 많습니다. 그중에서는 고향으로, 내가 살던 동네로 돌아가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못 간다고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지역의 설계사무소들이 이런 학생들을 한두 명 데리고 디자인하고 그렇게 해서 소규모 프로젝트에 설계공모 참여할 수 있는 환경, 분위기가 조성된다면 어떨까요? 처음에는 조금 무리더라도 체질 개선을 하고 2년, 3년만 정착되어도 지역경제 활성화, 청년 실업 문제와 연동되어서 파급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염철호 기존 공공건축 관련 정책과 제도의 개선점에 대한 논의가 빠질 수 없겠습니다. 정부는 공공건축 디자인 개선을 위한 절차가 지속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가칭)공공건축 특별법’ 제정을 포함하여 다양한 정책과 제도 마련을 검토 중입니다. 실효성 있고 지속 가능한 공공건축 정책을 위해 앞으로 무엇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연구소의 공공건축지원센터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 의견 부탁드립니다.

육근형 먼저 최근에 총괄·공공건축가 제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만, 지원해주는 부서가 없으면 효과적이기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 명의 건축사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원래의 취지대로, 제도가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건축사를 지원하고 대변하는 행정조직이 필수적이라고 보입니다.

설계공모가 더욱 활성화되면서 적정한 제출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기준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시 도시공간개선단에서는 ‘약식 공모를 진행했을 때 조감도가 없어야 한다’와 같은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실제로는 공무원들이 요청을 합니다. 이러한 추가 업무의 범위와 대가기준과 관련된 매뉴얼 등 가이드가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에서 좋은 공공건축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해보면 어떨까 합니다. 건축사의 전문 분야와 이력 같은 것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면, 공공건축가 선정뿐 아니라 설계공모 심사위원을 구성할 때 활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염철호 센터에서는 설계공모에 참여하는 부담이나 심사하는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제도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외의 몇몇 국가에서 실시하고 있는 ‘쇼트리스트’ 방식이나, 제출물이나 심사 절차를 보다 간소화 하는 방식 등입니다.

김소라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를 통해 많은 성과가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사전검토를 통한 피드백이 실제로 반영되었는지, 검토 의견이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의 설립 근거가 마련되었는데, 이것이 잘 운영되기 위해서는 건축도시공간연구소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각 지역 공공건축지원센터와 긴밀한 협업 시스템을 구축하고, 공공건축물에 대한 사전검토뿐 아니라 사후관리, 모니터링, 이를 통한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는 역할을 해나갈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안우성 시공단계에서도 원 설계대로 잘 조성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실제 준공 시 설계의도가 제대로 구현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가 마련되어야 건강하고 좋은 공공건축물 조성이 이루어질 것입니다.